스팸방지 종합대책

’11. 1. 21

방송통신위원회
Ⅰ. 개요 및 추진경과

Ⅱ. 스팸현황 및 문제점
  1. 스팸 개요
  2. 스팸 현황
  3. 환경변화에 따른 스팸대응의 문제점

Ⅲ. 추진 전략

Ⅳ. 세부 추진과제

1. 휴대전화 스팸 방지
   가.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스팸발송 억제
      ①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강화
      ② 인터넷전화(070) 서비스를 악용한 스팸발송 제한
      ③ 가입자 본인확인 준수여부 관리 강화
   나. 전송수신 단계의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
      ④ 이동통신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확대
      ⑤ 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제한 체계 구축
   다. 스팸 전송자 규제 강화
      ⑥ 스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⑦ 불법 성인스팸(060 포함) 전송업체 제재 강화
   라. 과태료 징수율 제고
      ⑧ 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

2. 신종 스팸 방지
   ⑨ 인터넷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개발·제공

3.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⑩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유통량 분석·공표
   ⑪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
   ⑫ 휴대전화 스팸 글로벌 공동대응기반 마련

4.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
   ⑬ SMART 스팸차단 및 대응 요령 홍보 강화

Ⅴ. 기대 효과
Ⅰ. 개요 및 추진경과

□ 배경
- 잡차 지능화되고 있는 스팸에 대한 사후적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예방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
  -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매년 실현 효과를 분석하고 기술발전 추세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수정·보완
  ※ 해마다 “연동계획(Rolling Plan)”을 수립함으로써 대책의 실효성 제고

□ 주요 스팸대책 추진경과 ('03년~’10년)

▶ 환경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불만이 가중되는 스팸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대응
  - 이메일 스팸 대응(‘03년~’05년) ⇒ 휴대전화 스팸 대응(‘06년~’09년)
▶ 민간참여 기반의 사전예방 중심의 대응 정책으로 전환(’09년 종합대책 이후)
  - 스팸의 발생→전송→신고 단계별 취약요인 개선
  - 스팸방지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한 실질적 차단효과 향상

(‘03년~’05년) ’00년대 이후 초고속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이메일 스팸에 대한 인프라 구축, 기술적 차단 등 기술대응에 주력

<table>
<thead>
<tr>
<th>시 행</th>
<th>주요 추진정책</th>
</tr>
</thead>
<tbody>
<tr>
<td>‘03. 1월</td>
<td>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td>
</tr>
<tr>
<td>‘03. 6월</td>
<td>스팸규제 대상 확대(이메일 ⇒ 전화/팩스 ⇒ 게시판)</td>
</tr>
<tr>
<td>’04년 ~’06년</td>
<td>OECD 스팸 워크샵 개최 및 「Anti-Spam Toolkit」개발 참여</td>
</tr>
<tr>
<td>’05. 3월</td>
<td>전화/팩스 광고에 대한 사전수신동의(Opt-in) 제도 도입</td>
</tr>
<tr>
<td>’05. 4월</td>
<td>「서울-멜버른 다자간 스팸대응 MOU」체결</td>
</tr>
<tr>
<td>’05.10월</td>
<td>스팸신고 접수처리 절차 개선(24시간 ARS 무인접수 도입 등)</td>
</tr>
<tr>
<td>’05.12월</td>
<td>이메일 스팸 차단기술 개발 및 보급 ※ 실시간 스팸차단리스트(RBL), 메일서버등록제(SPF) 등</td>
</tr>
<tr>
<td>’05.12월</td>
<td>「스팸메일 차단실태 활용 가이드」발간배포</td>
</tr>
</tbody>
</table>

☞ 스팸수신량 대폭 감소 : ’03년 29.1통 → ’05년 6.9통 → ’10년 2.2통
(’06년~’09년) 사전수신동의(Opt-in) 제도 도입(’05.3월) 이후, 이용자 불편이 더 큰 휴대전화 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table>
<thead>
<tr>
<th>시 행</th>
<th>주요 추진정책</th>
</tr>
</thead>
<tbody>
<tr>
<td>’06. 3월</td>
<td>스팸전송에 이용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정보/계약해지 도입</td>
</tr>
<tr>
<td>’06. 8월</td>
<td>이통사 원링(one-ring) 스팸 탐지·차단 시스템 구축</td>
</tr>
<tr>
<td>’07. 2월</td>
<td>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td>
</tr>
<tr>
<td>’08. 4월</td>
<td>불법 성인스팸 전송업체의 발생과금 취소 및 이용제한</td>
</tr>
<tr>
<td>’08. 9월</td>
<td>‘사업자를 위한 스팸방지 안내서(새 가이드라인)’ 발간</td>
</tr>
<tr>
<td>’09. 9월</td>
<td>악성스팸(도박/대출/의약품) 전송자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td>
</tr>
</tbody>
</table>

☞ 스팸수신량 대폭 감소 : ’05년 0.74통→’09년 0.44통 →’10년 0.43통

(’09년말~) 스팸의 전송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기법이 보다 지능화됨에 따라, 스팸의 발생 및 유동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점의 종합적 대책 마련

<table>
<thead>
<tr>
<th>시 행</th>
<th>주요 추진정책</th>
</tr>
</thead>
<tbody>
<tr>
<td>’09.11월</td>
<td>이용자 1인당 휴대폰 개통 최신 수 제한</td>
</tr>
<tr>
<td></td>
<td>※ 일반(3개), 저신용자(2개), 채무불이행자(1개)</td>
</tr>
<tr>
<td>’09.11월</td>
<td>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일 발송량 500건 제한</td>
</tr>
<tr>
<td>’09.11월</td>
<td>휴대전화 광고 수신거부 대행서비스 제공(대리운전, 성인 업체 대상)</td>
</tr>
<tr>
<td>’09.12월</td>
<td>대포폰 개통 방지 포스터 배포 및 라디오 공익광고</td>
</tr>
<tr>
<td>’10. 4월</td>
<td>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개발/제공</td>
</tr>
<tr>
<td>’10.7~9월</td>
<td>청소년을 위한 동영상 스팸방지 교육자료 개발·배포</td>
</tr>
</tbody>
</table>

▶ 한국의 스팸대응 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선진사례로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벤치마킹을 위한 공동협력 확대 요구가 점차 증대

• '세계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FIRST)’ 주관 모범사례 경진대회 2위 수상(’08)
• '세계이통사협회(GSMA)’의 “스팸신고 가이드라인”에 ‘휴대전화 간편신고 서비스’ 반영 추진 ☞ 사실표준화(de facto standard) 효과 발생

▶ 향후에는 사전예방적 대응을 지속개선하는 한편, 그간 미진했던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신증스팸 등 사각지대의 해소 추진에 주력
『스팸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4개 영역, 13개 세부 과제)

① 휴대전화 스팸 방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세부 추진과제</th>
</tr>
</thead>
</table>
| 스팸발송 억제               | ○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강화  
○ 인터넷전화(070) 서비스를 악용한 스팸발송 제한  
○ 가입자 본의적 반려여부 관리 강화                                    |
|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       | ○ 이용사『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확대  
○ 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제한 체계 구축  |
| 스팸전송자 규제 강화        | ○ 스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불법 성인스팸(060포함) 전송업체 제재 강화  |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 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  |

② 신종 스팸 방지

○ 『인터넷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개발 · 제공

③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팸유용량 분석 · 공표  
○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  
○ 휴대전화 스팸 글로벌 공동대응기반 마련

④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

○ 이용자 스팸방지 SMART 5대 수칙 제정 등 스팸차단 요령 홍보
II. 스팸현황 및 문제점

1. 스팸 개요

□ 스팸(spam)의 정의

○ 수신자 의사에 반(反)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정보통신망법상 매체별 광고전송 규제방식 >

○ 스팸 정보의 구조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

예시(대출스팸)

최저금리 등급무한 대출 가능
조회기록 없이 당일 송금 수신거부 080-000-0000

2010.10.27. 오후 13:00
000-0000-0000

※ 실제 메시지가 발송된 번호는 수신자의 휴대전화에 보여지지 않음
(단,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KISA에서 확인 가능)
< 이메일(E-mail) >

### 기본적인 헤더(header) 정보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명칭</th>
<th>의미</th>
</tr>
</thead>
<tbody>
<tr>
<td>필수 정보</td>
<td>Date</td>
<td>발송일시</td>
</tr>
<tr>
<td></td>
<td>From</td>
<td>발송자 이름 및 이메일주소</td>
</tr>
<tr>
<td></td>
<td>To</td>
<td>수신자 이메일주소</td>
</tr>
<tr>
<td>옵션</td>
<td>Subject</td>
<td>제목</td>
</tr>
<tr>
<td>동적 정보</td>
<td>Message-ID</td>
<td>유일한 식별번호</td>
</tr>
<tr>
<td>(메일서버에</td>
<td>Received</td>
<td>이메일 전송경로</td>
</tr>
<tr>
<td>의해 작성됨)</td>
<td></td>
<td>* 모든 경로를 표시하며, 가장 아래의 Received 정보가 최초 발송지를 나타냄</td>
</tr>
<tr>
<td></td>
<td>Return-Path</td>
<td>반송 주소</td>
</tr>
<tr>
<td></td>
<td>Reply-To</td>
<td>회신 주소</td>
</tr>
<tr>
<td>사용자 정의</td>
<td>X-Mailer</td>
<td>이메일 발송 프로그램</td>
</tr>
</tbody>
</table>

※ 대부분의 헤더정보는 스팸메이레 의해 위·변조 가능

### 스팸발생의 주요 요인

1. (스팸) 휴대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은 다른 수단에 비해 광고가 용이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높아 스팸의 수단으로 억제
   - 특히, 매체의 특성상 전송자 신원을 은폐하기가 용이하여 법률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은밀한 불법거래를 위한 광고에 주로 이용
2. (통신사) 스팸메이레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고, 스팸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 홍보 부족 등 자율규제 노력 미흡
3.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스팸전송 목적의 휴대전화 개통 등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 스팸차단 기능·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고 등 대응 조치에 소극적
스팸의 폐해

스팸의 증가는 정보통신 매체의 편리성, 신뢰성, 효율성 위협

스팸은 수신자에게 불편과 짓중 등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하며, 시간낭비와 생산성 감소 등 불필요한 사회비용 유발

스팸으로 인한 피해 유형

<table>
<thead>
<tr>
<th>휴대전화 스팸</th>
<th>이메일 스팸</th>
</tr>
</thead>
<tbody>
<tr>
<td>생산성 저하 21.3%</td>
<td>생산성 저하 26.4%</td>
</tr>
<tr>
<td>경제적 피해(최소한의 비용) 발생 후 12.3%</td>
<td>경제적 피해 발생 후 7.8%</td>
</tr>
<tr>
<td>필요한 정보수신 방해 17.6%</td>
<td>필요한 정보수신 방해 14.2%</td>
</tr>
<tr>
<td>개인정보 유출 22.1%</td>
<td>개인정보 유출 24.3%</td>
</tr>
<tr>
<td>시간낭비 24.3%</td>
<td>시간낭비 24.3%</td>
</tr>
<tr>
<td>바이러스 감염 6.4%</td>
<td>바이러스 감염 0.2%</td>
</tr>
</tbody>
</table>

※ 조사표본: 개인 PC를 통해 월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국의 만13세~59세의 인터넷 이용자 4,000명(성별연령대별 축화하여 표본 추출)

자료: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KISA)

메시지 전송・저장에 따른 네트워크 자원 소모를 가중시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IT 녹색성장을 저해

스팸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법・제도) 스패규제를 위한 법체계 마련, 국민의 고충처리

(기술대응) 스팸의 탐지・분석・대응의 기술개발・보급,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자율규제) 사업자의 법규 준수율 제고 및 적극적 자율규제를 위한 관리・감독

(인식제고) 스팸대응 Best Practice 제공, 스팸방지 요령 등 홍보
2. 스팸 현황

□ 이용자 1인당 일평균 스팸수신량 감소 추세 향화

스팸 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고질적인 악성스팸은 전송경로의 다양화와 수단의 지능화로 인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음

- (휴대전화) '09년 하반기 종합대책의 발표·시행을 통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새로운 경로를 통한 스팸전송의 확대로 인해 '10년 하반기부터 소폭 증가 조짐

- (이메일) '08년말 대형 스팸 친화적 호스팅 업체(McColo)의 폐업으로 급감하였으나, 봇넷을 통한 스팸전송 위협은 여전히 상존

※ 국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이메일의 특성상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 대응만으로는 스팸 수신량을 통제하기가 어려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휴대전화</th>
<th>이메일</th>
</tr>
</thead>
<tbody>
<tr>
<td>조사 대상</td>
<td>만 12~59세 휴대전화 이용자 1,000명 (성별/연령별/지역별 이통사 시장점유율 고려)</td>
<td>만 12~59세 이메일 이용자 1,000명 (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률 고려)</td>
</tr>
<tr>
<td>조사 방법</td>
<td>조사대상자의 스팸메시지 전달/웹등록 및 설문조사를 통한 확인·검증</td>
<td>조사대상자 PC에 수신량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측정</td>
</tr>
<tr>
<td>표집오차</td>
<td>신뢰구간 95% 기준, 오차 ±3.1%</td>
<td>신뢰구간 95% 기준, 오차 ±3.2%</td>
</tr>
<tr>
<td>조사기관</td>
<td>한국리서치 ('10년 현재)</td>
<td>메트릭스 ('10년 현재)</td>
</tr>
</tbody>
</table>

< 스팸수신량 측정방법 >

- 표：허위주소 등록 및 통신대책
- 통계：통계청
- 신뢰구간：95%
스팸신고 접수 지속 증가

○ 한글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Spam Response Center)’ 개소(‘03년) 이후, 스팸신고의 편의성 증진으로 신고 접수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도입(‘07년)과『신고 서비스의 국내 단체 표준화』(‘09.12월)에 따라 신고 건수 폭증

< 연도별 스팸신고 접수 증가 추이 >

○ 신고건수는 스팸 수신량이 감소하더라도 신고방법의 개선, 이용자의 신고의식 향상 등에 따라 증가 가능

- ‘간편신고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에 따라 신고인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향후에도 신고건수는 지속 증가 예상

※ 월평균 신고인 수는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 수의 약 4%에 불과

< 연도별 스팸 신고인 수 증가 추이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2008년</th>
<th>2009년</th>
<th>2010년(1~11월)</th>
</tr>
</thead>
<tbody>
<tr>
<td>휴대전화 이용자 수</td>
<td>4,578만명</td>
<td>4,794만명</td>
<td>5,062만명</td>
</tr>
<tr>
<td>월평균 스팸 신고인 수</td>
<td>54만명 (12%)</td>
<td>97만명 (2.0%)</td>
<td>184만명 (3.6%)</td>
</tr>
</tbody>
</table>
3. 환경변화에 따른 스팸대응의 문제점

□ 스팸 전송경로의 다각화(풍선효과)
  o '09년 휴대전화시 스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이후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C2P, 웹메시징 등)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 증가
    ※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한 스팸전송 비율 : 43%(‘09.3분기) → 67%(‘10.4분기)
  o 통신비용이 저렴한 인터넷전화(VoIP)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스팸의 발송 또는 회신 번호로 남용되는 사례 증가
    ※ 스팸에 이용된 인터넷전화 번호 수 : 6,840개(‘09.2분기) → 86,944개(‘10.4분기)

□ 스팸 전송기법의 지능화·악성화
  o 인지도가 높은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정보를 가공하여 정상적인 메시지로 위장한 사기성 스팸으로 인한 피해 발생
    ※ "포토메일이 도착했습니다"와 같은 낙시문자를 보내 성인화보를 내려 받게 하여 50억원의 정보이용료(건당 2,990원)를 청긴 업체 적발(‘10.10.29일, SBS)
    ※ 유명 금융지주회사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도용하여 스팸문자를 보내는 불법 사기사용 대출 심각(‘10.9.22일, 아시아경제)

□ 불법적·악의적 목적의 스팸 만연
  o 대출, 도박, 의약품, 성인, 통신서비스 가입권유 등 5대 스팸이 전체 신고건의 77% 차지(‘10년)
    -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이나 도박, 의약품은 대개 법에서 그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의 사회범죄를 유발할 우려도 있음
    ※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핫살론 대출을 해준다는 스팸문자를 보내어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이를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10.8.20일, 연합뉴스)
□ 적극적인 스팸방지 인식 부족

○ 스팸방지 종합대책('09.10월)의 일환으로, SKT에 이어 LGU+와 KT가 ’10년부터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 뛰어난 스팸차단 효과와 무료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가입률은 저조(평균 9%)
  ※ 서비스 제공시기 : SKT('07.12월), LGU+(10.1.27일), KT('10.4.6일)

□ 신중스팸 문제 지속 발생

○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흡한 중소 규모 게시판을 타겟팅한 스팸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 서비스가 많아 최소한의 관리도 안되는 실정
  - 특히, 포털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일반 호스팅이나 무료 게시판 서비스운영자들은 스팸 게시글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낯 뜨거운 스팸댓글 인터넷 도배('09.12월, 매일경제)

□ 선제적・적극적 스팸대응 체계 미비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많은 스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실시간 현황파악 및 대응체계 미비
  ○ 신고접수 및 트랩탐지를 통해 확인된 휴대전화 스팸의 발신・회신 번호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 해당 사업자의 개별 차단에 그치고 있으며, 자동화 체계 미흡에 따른 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실시간 정보공유 및 차단을 위한 통합 자동화 관리체계 마련 필요
III. 추진 전략

기 본 방 향

■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 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
■ 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

1. 휴대전화 스팸 방지

①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스팸발송 억제

-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Biz-SMS, C2P 등) 사업자에 대해 통신회선의 전송속도를 축소하고 사업자간 스팸 전송자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 인터넷전화 (VoIP) 사업자의 서비스 개통 및 문자발송량 관리 등 스팸방지 자율규제 수준 강화

- 대리점 등의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확인에 대한 이통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스팸발송 휴대전화 개통 방지

② 전송·수신 단계의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

-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이통사『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

- 확인된 스팸번호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스팸문자를 네트워크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하고, 악성스팸 전송자를 최단시간 내 가려내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실시간 스팸 통보·관리체계 구축』
3. 스팸 전송자 규제 강화

- 스팸 전송자 규제를 위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범죄의 개선방안 검토 및 사업자들 위한 안내서 현행화
- 전송자 규제를 위해 부당하게 정보이용료를 편취하는 성인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4. 과태료 조치율 제고

- 관련부처 재산DB 연계를 통해 정수 가능한 스팸 과태료를 파악하여 별개 지수화하고, 정수활동을 독려하여 정수율을 제고(정수 가능액 대비 목표 20%)하는 한편, 관련 수사능력 강화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범위 및 정수 방법의 다각화 검토

2. 신중 스팸 방지

-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을 실시간 자동 분석하여 차단하는 서비스를 정부가 개발하여 개인, 중소기업, 인터넷언론 등에 무상 제공

3. 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
- 휴대전화나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스팸감축 노력 제고
- GSMA ‘글로벌 스팸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스팸방지 기술과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협력 확대 도모

4.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

- 스팸차단 및 신고요령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팸방지 SMART 5대 수칙' 등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Ⅳ. 세부 추진과제

1. 휴대전화 스팸 방지

가. 사업자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스팸발송 억제

①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강화

개 요

○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통신 회선 전송속도 축소 등 통신사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관리·감독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포폰 등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발송 제재 강화 이후, 웹폰 방식의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C2P)를 통한 스팸발송 증가

- 여러 단계의 재판매를 거치는 구조이므로 스팸발송자 신원확인이 어렵고, 스팸에 대한 제재절차·방법의 현실성이 떨어짐

<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개요 >

-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 웹기반의 전용 S/W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대량의 문자발송이 가능한 서비스(주로 기업체 대상)

<table>
<thead>
<tr>
<th>구분</th>
<th>Biz-SMS</th>
<th>C2P (Computer to Phone)</th>
</tr>
</thead>
<tbody>
<tr>
<td>문자 전송경로</td>
<td>이통사로부터 부여받은 전용회선 → 이동전화망</td>
<td>유선전화망(PSTN) → 이동전화망</td>
</tr>
<tr>
<td>중계사/재판매사</td>
<td>총 12개 (이동3사 봉계)</td>
<td>총 38개 (현재는 KT만 서비스 제공)</td>
</tr>
<tr>
<td>SMS 발송요금</td>
<td>11~18원/건</td>
<td>10~14원/건</td>
</tr>
</tbody>
</table>
<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한 스팸전송 증가 추이 >

□ 추진 방안

- 대량 스팸이 발송된 사업자에 대한 통신화신의 전송속도 축소
  - Biz-SMS 중계사 및 C2P 재판매사에 매월 스팸감축 목표를 부여
  ※ 목표 : 사업자별로 전월 KISA에 신고된 스팸건수 대비 20% 감소
  -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계사 및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이통사와 유선사가 통신화신(전용선)의 전송속도를 일정비율로 축소
  ※ KISA가 매월 사업자별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여 제재대상을 통보

- Biz-SMS 중계사 및 C2P 서비스 재판매사간 스팸발송 사업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반복적인 서비스 가입을 제한
  ※ KISA가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DB를 구성하고, 이를 사업자와 공유

- 개인 이용자의 ID당 1일 문자발송량을 휴대전화와 동일한 수준인 500통으로 제한(법인은 예외)
  ※ 휴대전화 문자발송량 제한 : 1,000통(‘06.8월) → 500통(‘09.11월)
  ※ 국내 이용자의 1일 평균 문자발송량 : 9.8통
□ 기대 효과

○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스팸과 관련하여 KISA로 접수 되는 월평균 신고건수가 '11년말까지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약 400만건 ('10.10월) → 약 240만건 ('11.12월)

□ 추진 일정

○ 목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한 전송속도 축소 정례화
  ※ 이통사 및 KT의 이용약관/계약서 개정 완료('10.9월)
  ※ '10.11월부터 9~12월 목표 미달성 업체(66개)에 대해 전송속도 축소 추진

○ 개인 이용자 ID 당 1일 문자발송량 500통 제한 : '11. 1월

○ 악성스팸 발송사업자 정보 공유 및 가입 제한 : '11. 1월
인터넷전화(070) 서비스를 악용한 스팸발송 제한

개 요
○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기관, 별정)의 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제한 및 문자발송량 관리 등의 자율규제 수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저렴한 통신비용 및 결합상품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전화 이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현황

- 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 : 10개(기간통신사 8개, 별정통신사 2개)
  ※ 정부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 기준이며, 재 판매사(별정통신사) 포함시 약 300여 개입
- 가입자 수 : 878만명 ('10.10월 기준)
  ※ 증가 추이 : 32만명('06년)→61만명('07년)→248만명('08년)→666만명('09년)
- SMS 발송요금 : 10~15원/통 (휴대전화는 20원/통 내외)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가 스팸 메시지의 발송 또는 회신번호로 남용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
- 반면, 스팸 관련 민원이 수신자가 속한 이동사로 집중되기 때문에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스팸대응 인식은 상대적으로 저조

스팸신고건 중 인터넷전화번호 남용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09.2분기</th>
<th>'10.4분기</th>
<th>증가율</th>
</tr>
</thead>
<tbody>
<tr>
<td>원발신번호</td>
<td>3,776</td>
<td>41,107</td>
<td>989%</td>
</tr>
<tr>
<td>회신번호</td>
<td>3,064</td>
<td>45,837</td>
<td>1,396%</td>
</tr>
</tbody>
</table>
□ 추진 방안

○ 스팸발송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회선을 할당받을 수 없으며, 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재가입 금지

※ 1년간 재가입 금지를 위해 계약해지 이후 해당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이용약관에 반영·공지 필요

○ 도박, 대출, 의약품 등 악성스팸에 다수가 이용된 경우, 해당 스팸발송자 명의의 모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 계약해지 추진 검토

※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스팸발송과 무관한 정상 번호도 계약해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 확인절차 마련 필요

○ 명의변경 후 재가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회선설치 장소가 같을 경우 동일인 개통여부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 강화

※ 명의는 다르나 주소가 같을 경우, 제재회피 스팸발송자일 가능성을 높음

○ 번호나 망을 재 임대하는 경우, 스팸방지 및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관리

- 기간통신사가 별정통신사(1, 2호)에 서비스 임대시 자사 수준과 동일한 스팸대응 조치 요구

○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1일 문자발송량을 휴대전화와 동일한 수준인 500통으로 제한(하드폰+소프트폰 포함)

※ 하드폰 : 전용 단말기와 AP기기를 통해 인터넷 망에 연결하여 통화하는 방식
※ 소프트폰 : PC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헤드셋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방식

□ 추진 일정

○ 번호당 1일 문자발송량 500통 제한 : ’11.2분기

※ 인터넷전화 사업자 이용약관 개정(’10.12월)
③ 가입자 본인확인 준수여부 관리 강화

개 요

○ 휴대전화 가입자 본인확인을 위한 이통사의 자율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명의 대여에 의한 선불폰 개통 및 스팸전송 악용을 최소화

현황 및 문제점

○ 대출, 도박, 의약품 등 악성스팸 전송자는 신원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대여한 휴대전화(속칭 '대포폰')을 악용하여 스팸을 전송

※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스팸전송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대부분 저신용자이거나 주거지가 불분명하여 과태료 체납을 가중시킴

○ 종합대책(‘09.10) 시행이후, 저신용자 등의 명의로 일반 휴대전화 (후불폰)을 개통하여 스팸을 전송하는 사례는 57% 감소

- 반면, 단기 대여 국외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악용한 선불폰 개통 사례는 대폭 증가(약 8배)

< 스팸전송에 악용된 휴대전화 현황 비교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09년 3분기</th>
<th>‘10년 3분기</th>
</tr>
</thead>
<tbody>
<tr>
<td>후불폰</td>
<td></td>
<td></td>
</tr>
<tr>
<td>내국인</td>
<td>17,998대 (95.7%)</td>
<td>7,743대 (64.3%)</td>
</tr>
<tr>
<td>외국인</td>
<td>290대 (1.5%)</td>
<td>251대 (2.1%)</td>
</tr>
<tr>
<td>선불폰</td>
<td>516대 (2.7%)</td>
<td>4,050대 (33.6%)</td>
</tr>
<tr>
<td>소계</td>
<td>806대 (4.3%)</td>
<td>4,301대 (35.7%)</td>
</tr>
<tr>
<td>합계</td>
<td>18,804대 (100%)</td>
<td>12,044대 (100%)</td>
</tr>
</tbody>
</table>

○ 특히, 스팸전송에 악용된 선불폰은 특정 대리점들을 통해 개통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통사의 감독 강화가 요구됨

※ 선불폰 개통 대리점(총 151개) 중 상위 10개 대리점에서 개통된 것이 82% 차지 (‘10.4월 ~ 6월)
□ 추진 방안

○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자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강화

-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로 선불폰 등을 개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대조 등 본인확인 절차 준수 유도
※ 본인확인 절차가 소홀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금전적 불이익 및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통사·대리점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 적극 시행

- 대출, 도박 등 악성스팸 전송에 악용된 휴대전화에 대해 명의자의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명의대여로 판단시 계약해지 조치

○ (방통위/KISA) 이통사의 관리·감독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 이용약관에서 정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자의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등) 보관의무 준수여부 점검

- 스팸전송에 악용된 선불폰을 개통해 준 대리점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계약사항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여부 등 확인
※ KISA는 신고정보를 토대로 다량의 선불폰 개통 대리점을 파악하여 각 이통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자율적인 제재조치 지원

- 고의적으로 편법을 통해 선불폰 개통을 방조·묵인한 경우 발견시 방통위 조사 또는 검·경 등에 수사의뢰

□ 추진 일정

○ 가입자 본인확인 관련 대리점 관리·감독 강화방안 협의 : '11.1~2월

○ (이통사) 스팸전송 선불폰 개통 대리점 점검 및 제재 : '11.3월~

○ (방통위/KISA) 이통사의 대리점 관리·감독 실태조사 : '11.2분기~
나. 전송수신 단계의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

4 이통사『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가입 확대

개 요

○ 이용자의 이통사『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가입 단계별 확대
※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문자메시지(SMS)의 전송과정에서 발신·회신번호, 본문 내용, 발송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SKT에 이어 LGU+와 KT가 '10년부터『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 뛰어난 스팸차단 효과와 무료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가입률이 저조(전체의 약 9%)

전체
가입자 수
(전체 대비)
처리용량
(전체 대비)
투입예산

제공시기
07.12월
'10.1.27일
'10.4.6일

SKT
2,561만명
307만명
450만명
35억원

LGU+
901만명
40만명
200만명
24억원

KT
1,599만명
98만명
450만명
27억원

합계
5,062만명
445만명
1,100만명
86억원

< 이통사별 서비스 제공 현황 (’10.12월) >

□ 추진 방안

○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약 720만명, 전체의 15%)에 대해 단계별로 일괄가입 조치
- 가입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만 예외 처리
- ①단계(초등학생 이하), ②단계(중·고등학생 등)
※ SKT는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110만명)에 대해 이미 일괄가입 처리(’09.8월)
소요 예산

- (이통사) 스팸차단 시스템 처리용량(H/W) 증설 : 160억원
  ※ 이통3사의 시스템 처리용량을 현재 평균 22%에서 100%로 증설을 전제로 산정
- (이통사) 스팸차단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40억원

기대 효과

- ’10년말부터 단계별 일괄가입이 시행될 경우, 약 3년 8개월 경과시 전체 휴대전화 이용자가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될 것으로 예상

<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 예상 >

<table>
<thead>
<tr>
<th>구분</th>
<th>'10년말</th>
<th>'11년말</th>
<th>'12년말</th>
<th>'13년말</th>
<th>'14.8월</th>
</tr>
</thead>
<tbody>
<tr>
<td>청소년</td>
<td>110만명</td>
<td>720만명</td>
<td>720만명</td>
<td>720만명</td>
<td>720만명</td>
</tr>
<tr>
<td>일반</td>
<td>335만명</td>
<td>500만명</td>
<td>1,940만명</td>
<td>3,380만명</td>
<td>4,340만명</td>
</tr>
<tr>
<td>합계</td>
<td>445만명</td>
<td>1,220만명</td>
<td>2,660만명</td>
<td>4,100만명</td>
<td>5,060만명</td>
</tr>
</tbody>
</table>

※ 청소년 이용자(약 720만명)는 ’11년 상반기 내 가입 완료, 일반 신규가입자(변호 이동 포함)는 월평균 120만명씩 증가하는 것을 전제

추진 일정

- 청소년 이용자(만19세 미만) 대상 서비스 일괄가입 시행 : ’11.2분기
  ※ 초등학생 미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일괄가입은 ’10.12월부터 시작
- 일반 이용자(신규가입) 대상 서비스 기본가입 시행 : ’11.4분기
⑤ 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제한 체계 구축

개 요

- 신고접수 등을 통해 확인된 스팸번호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스팸문자를
  네트워크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위한 실시간 통보·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KISA가 신고접수 등을 통해 확인된 톡봇방식의 스팸번호를 해당
  통신사에 통보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으나,
  - 해당 사업자의 개별 차단에 고치고 있으며, 자동화 체계 미흡에
    따른 처리지연 등의 문제 발생
- 웹봇방식의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Biz-SMS, C2P, 웹 메시징)는
  다수 이용자가 1개의 번호나 ID를 공유하는 특성 때문에 개별번호
  단위의 차단이 불가하여 즉각적인 스팸전송 차단에 한계

추진 방안

- (폰투폰) KISA가 신고접수 및 트랩탐지를 통해 확보한 스팸문자의
  발신, 회신번호를 추출하여 차단리스트(M-RBL)를 생성 후 이통사 제공
  - 이통사는 M-RBL에 등재된 번호로부터 자사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모든 스팸문자를 실시간으로 일괄차단

※ M-RBL : Mobile Realtime Blocking List

<M-RBL 생성 및 연동>

- 악성스팸(도박, 대출, 의약품 등) 위주로 전송빈도, 번호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발신·회신번호 리스트(2종)를 1시간 주기로 생성(1일 약 200개 신규번호 등재 예상)
- 외부 노출 방지를 위해 KISA와 이통사간 암호화 통신으로 연동
(웹투폰) KISA가 신고접수 및 트랩탐지 정보를 토대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스팸문자를 추출하여 해당 사업자에 전송일시, 광고내용 등 세부내역을 1시간 주기로 제공

- 사업자별로 최대시간 내에 실제 스팸발송자를 확인하여 악관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 후 결과를 KISA에 통보토록 조치

※ 대상: 위법사실이 즉시 확인될 수 있는 악성스팸(도박, 대출, 의약품 등)과 범죄의 확인절차를 거친 성인, 대리운전, 인터넷가입 등

☐ 소요 예산

○ (KISA) M-RBL 및 실시간 이용제한 관리시스템 구축 : 1억원

○ (이통사) M-RBL 적용 및 스팸문자 일괄차단 체계 구축 : 5억원

☐ 기대효과

○ 확인된 스팸번호로부터 추가로 전송되는 모든 스팸문자를 일괄차단함으로써 스팸의 발송자원을 무력화

※ 이통사 시뮬레이션 결과, M-RBL에 의해 휴대번호 1개당 약 2,700여개 차단 가능하고, 1일 250개 등록시 68만여 건의 스팸문자 차단 가능

○ 웹투폰 방식의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스팸의 실제 발송자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 추진 일정

○ M-RBL 적용 및 스팸문자 일괄차단 시행 : '11.1월

※ M-RBL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이통사 연동을 통한 시범운영('10.11~12월)

○ 이용제한 대상 통보 및 실시간 조치 시행 : '11.1월

※ 실시간 이용제한 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10.11~12월)
< M-RBL 구축·적용 개념도 >

스팸 전송 번호에 대한 차단(M-RBL) 및 이용제한 프로세스

신고
- 도착/대중/의약
- 성인
- 표가의무 위반
- 유형 구분
- 회선 번호
- 표시

예방
- CIP(B2, C2P)
- 전화 번호
- 번호 결제
- 보이표본

 kristian: 보이표본, 전화번호, 전화번호, CIP(B2, C2P)

트랩
- 전화 번호
- 번호 구분
- 표시
- 보이표본
- CIP(B2, C2P)
다. 스팸 전송자 규제 강화

⑥ 스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개 요
- 스팸 전송자 규제를 위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를 위한 안내서를 현행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 기기의 융복합, 다변화 및 광고성 정보 전송가능 매체
  다양화로 인해 스팸규제 법령의 정비 필요
-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돕기 위해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08.9월 개정)」를 제공 중이나, 최근의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행화 필요
  ※ 명칭 변경 : 「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08.9월)」→「불법스팸방지 안내서('10.1월)」

□ 추진 방안
- 정보통신망법의 스팸규제 조항에 대한 개정방안 검토
  - 현행 스팸규제의 대상은 서비스(이메일)와 전송기기(전화·팩스)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 단위로 재편
    ※ 스마트폰 이용의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스팸규제 조항 적용이 모호한 경우 발생 우려
  - 옵트인 예외사항인 기존거래관계의 요건(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광고성정보 전송이 가능한 재화·용역의 종류를 한정
  - 인터넷 상에서 대량의 스팸 게시글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
    프로그램의 판매·유통 및 이용 금지
스팸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정수가 어려운 행정질서법(과태료)의 한계를 감안하여, 스팸전송에 대한 제재를 과징금, 벌금으로 전환
※ 징벌 대상, 상한금액, 개선사항,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09~'11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시민, 학계 등)를 활용하여 효과성 분석 및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대책에 반영 추진
- 법률에 금지된 제화․용역(도박, 무등록자 대출, 불법유통의약품 등)의 스팸 전송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적극적 법 개정 활동 추진

<망법 개정안(정부 발의, '08.11월)>
제99조(전송 제한 정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99조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팸전송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행위(대포폰 개통 등) 금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스팸방지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

「불법스팸방지 안내서」개정
- 사업자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09년~'11년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내용 및 정책 변경사항 등을 반영
- 안내서는 책자로 인쇄하여 유관 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작하여 방통위, KISA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추진 일정
- 개정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발간·배포 : '11.1월 ~
-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법령 스팸규제 조항 개정 검토 : '11년
불법 성인스팸(060 포함) 전송업체 제재 강화

개 요

○ 성인스팸 전송업체의 부당이득 편취를 막기 위해 과금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사기성 스팸 전송업체는 즉시 계약해지 및 재가입 금지

현황 및 문제점

○ 사기성 성인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계약 해지자가 타 통신과금 서비스에 재가입하여 스팸을 지속 전송

추진 방안

○ 성인스팸 전송업체에 대한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제한 기준 강화
  - 사전동의를 했거나 거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스팸으로 신고할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전송 금지
  - 저인 가장, 무료수신거부 번호(080) 미기재 등 표기의무 위반, 야간시간대(21시~8시) 전송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 사기성 성인스팸 전송업체에 대해서는 관련자료와 함께 즉시 수사의뢰 조치

○ 사기성 스팸 근절을 위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 점검하여 실효성 확보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 다날, 인포허브, 모빌리언스,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 사기성 스팸 전송업체가 부당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이용료 취소, 서비스 계약 해지 및 관련정보를 공유하여 재가입 제한(영구 퇴출)

추진 일정

○ 사기성 스팸전송자 즉시 계약해지 시행 : ’11.1월
  ※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제한 처리지침 개정(KISA) 및 시행(‘10.9월)
라. 과태료 징수율 제고

| 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 |

개 요

스팸 과태료 징수율 개선과 스팸 발송자의 처벌 강화를 위해 관계 인력을 증원 및 기획 수사 등을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스팸 과태료 징수율 미흡에 대해 매년 국회 지적사항에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중앙전파관리소 징수담당 인력이 없어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납부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업무 추진

< 징수 현황 및 담당인력(단위 : 백만원, 명) >

<table>
<thead>
<tr>
<th>기간</th>
<th>부과</th>
<th>징수</th>
<th>미납</th>
<th>징수율(%)</th>
</tr>
</thead>
<tbody>
<tr>
<td>’99년 ~ ’10.9월</td>
<td>83,957</td>
<td>1,690</td>
<td>82,267</td>
<td>2.0</td>
</tr>
</tbody>
</table>

인력 

<table>
<thead>
<tr>
<th>서울</th>
<th>부산</th>
<th>광주</th>
<th>대전</th>
<th>대구</th>
<th>전주</th>
<th>제주</th>
<th>울산</th>
</tr>
</thead>
<tbody>
<tr>
<td>28</td>
<td>4</td>
<td>24</td>
<td>24</td>
<td>24</td>
<td>24</td>
<td>24</td>
<td>24</td>
</tr>
</tbody>
</table>

※ 인력은 스팸 과태료 부과 전담 인력이 아닌 타 업무(국유재산, 물품 등)와 겸임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처분(압류 등)을 위한 재산파악 시 금융자산을 (유동성 자금) 조회할 수 없어 체납액 누적 및 결손 처분 불가
※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국세 기본법 제81조13(비밀유지)에 따라 조회 불가

중양전파관리소에서 ’08.9.14.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받아 스팸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증원없이 타 법령의 수사인력에 추가로 부과된 업무로 인해 강력한 수사력에는 한계

<table>
<thead>
<tr>
<th>계</th>
<th>본소</th>
<th>지방전파관리소(11개)</th>
<th>지소당 평균인력</th>
</tr>
</thead>
<tbody>
<tr>
<td>28</td>
<td>4</td>
<td>24</td>
<td>2.2명</td>
</tr>
</tbody>
</table>

※ 수사 시에는 한 팀이 최소 4명이 되어야 하며, 평균 2.2명은 스팸수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추진방안

○ 금융재산 조회, 실제 스팸 발송자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
  - 과태료 체납자 재산파악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토록 관계 기관(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법령 개정 협의
    ※ 금융실명법 개정 협의 불가시 법령 개정이 가능한 지를 검토
  - 실질적인 스팸 전송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명의도용, 임시대여의 경우)
    법령 개정 검토

○ 스팸 과태료 징수 및 수사를 위한 전담인력 중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 추진
  - 징수전담 인원 : 44명(정수 2인을 1팀으로 2개팀 운영, 11기관)
  - 수사전담 인원 : 64명(수사 4인을 1팀으로 2개팀 운영, 11기관)

○ 관계기관(검찰)협력하여 년 4회 스팸 발송자 근절을 위한 기획 수사 추진
  - 기획수사와 함께 스팸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홍보 될 수 있도록 방송 시사 프로그램 방영 추진

○ 지능범죄에 속하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강력한 수사를 위해 관계기관 (검찰)협조하여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

○ 기존 과태료 징수율외에 징수 가능 과태료의 징수율 등 지수를 다양화 하고 구분해서 관리하는 등 과태료 징수율 계산방식 개선

□ 추진일정

○ 법령 개정 협의 등 제도개선 : ’11년
○ 전담인력 중원 : ’11년
○ 검찰과 기획 수사 및 전문교육 추진 : ’11년 4회, 2회
○ 과태료 징수율 계산방식 개선 : ’11.1월
2. 신종 스팸 방지

인터넷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개발제공

개요

인터넷 홈페인저, 카페, 블로그 등의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스팸 게시글 등록을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하여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현황 및 문제점

기본적인 스팸차단 기능이 제공되는 포탈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호스팅이나 무료 게시판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스팸 게시글 등록에 대한 대응방법 부재

- 대부분 자동적인 스팸차단 기능이 없어 관리자의 수작업에 의한 사후 모니터링 및 삭제 방식으로 운영

※ 주요 포탈들은 100~300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스팸댓글을 삭제하는 반면, 모니터링 인원이 소수인 언론 사이트나 블로그는 스팸에 취약

추진 방안

인터넷 게시글 분석 및 스팸필터링 시스템 구축

-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제목, 본문의 내용 및 작성자의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스팸일 가능성을 점수 형태로 산정

※ 변칙표기 방지를 위한 ‘형태소 분석’ 기능 및 정교한 분석-판단을 위한 ‘베이지안(Bayesian) 함수’ 등 확률기법 적용

- 게시판 운영자가 스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점수를 스스로 정할 수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자유로이 조정 가능

※ 스팸으로 판단된 글은 무조건 차단하거나, 별도 승인절차(CAPTCHA 기법 등)를 거친 후 게시되도록 운영자가 설정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게시글 차단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 게시글을 실시간 분석하여 스팸을 걸러주는 기능(application)을 서버, OS 등 운영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형태로 제공

※ 주요 상용 게시판 S/W 뿐만 아니라 포탈에서 제공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도 손쉽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 실시간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

□ 소요 예산

○ (KISA) 인터넷 게시글 분석 및 스팸필터링 시스템 구축 : 4억원

□ 추진 일정

○ 주요 게시판 S/W 제공업체 및 포털과 협의 : '11.2~5월
○ 인터넷 게시글 분석 및 스팸필터링 시스템 구축 : '11.9월
○ '인터넷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제공 : '11.10월
3.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table>
<thead>
<tr>
<th>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유통량 분석·공표</th>
</tr>
</thead>
<tbody>
<tr>
<td>개 요</td>
</tr>
<tr>
<td>ㅇ 신고접수 통계 및 스팸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휴대전화나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스팸감축 노력 제고</td>
</tr>
</tbody>
</table>

□ 현황 및 문제점

ㅇ 스팸감축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 정부 주도형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처가 미흡

ㅇ 스팸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수신단 사업자에 비해 발신단 사업자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유사·동종 사업자간에도 차이 존재

ㅇ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감축 노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지수 산정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안을 점진적으로 보완

□ 추진 방안

ㅇ 스팸의 전송과정에 관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스팸유통량 감축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항목 도출

  - (휴대전화) 이통사별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유/무선전화·Biz-SMS·인터넷전화 등 사업자별 스팸발송량 등
  - (이메일) 주요 포탈별 이메일 계정당 스팸수신량, ISP 등 네트워크 사업자별 스팸전송량 등

※ KISA의 신고접수 또는 트랩탐지 정보 및 스팸수신량 조사 결과 등 활용
학계 및 유관기관․투사업자의 전문가들로『스팸지수 연구반』을 구성하여 공표 내용과 방법 등을 검토하여 결정

스팸수신량 조사결과를 기초로 국내․투외 스팸 동향이나 정보통신환경변화 등에 맞추어 대상 사업자 및 항목 등은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

스팸유통량 관련 항목은 국내 “국가 정보보호지수”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개발중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의 세부지표에 반영 추진

※ ITU는 ’12년까지 “글로벌 사이버보안 지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계획임

추진 일정

전문가 및 사업자 협의체 발족 : ’11.1월

공표 내용 보급 협의 및 시뮬레이션 : ’11.1~2분기

스팸유통량 공표 : 반기별 1회

주요 정보보호 지수에 스팸유통량 항목 반영 추진 : ’11년~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

개요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현황을 실시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량의 스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실시간 현황파악 및 대응체계 미비
  - 스팸정보의 수집이 주로 신고접수, 트랩탐지와 같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채널로 수집된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미흡
  - 이메일 스팸의 경우, 외부 보안업체에서 발표하는 스팸관련 통계 자료·동향정보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추진 방안
○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조사·연구
  - 실시간 스팸현황 파악·분석을 위해 통신사 등과 스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데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실시간 스팸정보 수집에 따른 법적 분쟁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스팸유통량 파악 및 동향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연구
    ※ 모니터링 가능한 항목을 도출하고 데이터들의 취합·분석 절차와 방법 정의
  - 수집·탐지된 스팸정보를 토대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각종 통계 유형을 정의하고 각 통계별 세부 산출모형 연구
    ※ 각종 통계 유형을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병행
정보화 전략계획 수행을 통한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사업자와의 데이터 연동
- 실시간 스팸유통량 및 정상메시지 대비 비율, 전송경로 및 컨텐츠별 스팸 현황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여 개발
-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스템 연동을 자동화하고 외부 노출 방지를 위해 암호화 통신 적용

<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분석 체계 구성도 >

□ 소요 예산
- 선행조사·연구 : 0.5억원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1.6억원
-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분석 시스템 구축 : 10억원

□ 추진 일정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 ’11.4~9월
  ※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선행조사연구(~ ’10.12월)
- 실시간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 ’12년
유대전화 스팸 글로벌 공동대응기반 마련

개 요

○ GSMA에서 추진중인 ‘글로벌 모바일 스팸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의 스팸대응 기술 및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스팸감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확대를 도모

GSMA 글로벌 스팸방지 프로젝트

○ (목적) 전 세계의 모바일 스팸정보를 수집하여 주요 통계, 동향 등을 분석하는 글로벌 리포팅 시스템 구축

- ’09.10월 처음 제안되어 ’10년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KT(한국), AT&T(미국), SFR(프랑스)가 참여 중

※ 미국의 스팸차단솔루션 제공업체인 Cloudmark사가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탁받아 추진 중이며, ’11년 이후 공식 사업화 예정(유료 상용서비스)

○ (정보수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통사가 자사 이용자로부터 신고 (report) 받은 스팸메시지를 GSMA 통합 시스템에 제공

○ (자료공유) GSMA로부터 분석결과를 피드백 받아 스팸대응에 활용

※ 현재는 트렌드 분석에 초점을 맞춰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스팸필터링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로 확대 가능

GSMA 개요

• GSMA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 설립 : 1987년
• 목적 : 이동통신 산업의 트렌드 및 방향을 결정하고, 타 분야와 컨버전스 사업의 추진을 통한 IT산업 주도, 신규성장 동력 발굴 및 글로벌 확산 등
• 참여 : 219개국의 800여개 이통사와 200여개 단말기 제조사

※ 한국에서는 KT와 SKT(이사회 멤버), 삼성전자와 LG전자(준회원)가 참여
추진방안

- GSMA와 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모바일 스팸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참여기관간 협력을 주도
  - 간편신고를 통해 접수된 국내 휴대전화 스팸 신고정보를 GSMA에 전달하고, 전체적인 통계, 트렌드 분석결과 등을 제공받음
  - 다른 나라의 휴대전화 스팸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스팸시장의 환경변화 등을 예측

- GSMA 프로젝트를 위한 스팸 신고방식의 하나로 간편신고 방식을 제안하고 향후 개발 예정인 ‘스팸신고 가이드라인’에 반영 추진

- 향후, 프로젝트 참여업체·기관 수가 증가하고 모바일 스팸의 국가간 전송이 활성화되면, 스팸필터링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 가능
  ※ 서로 다른 망들이 IP 기반으로 하나의 통합된 구조를 갖는 All IP 시대가 도래하면
  국경을 넘어 전송되는 스팸문자로 인한 문제가 대두될 전망

기대 효과

- ‘IT 강국’ 및 ‘스팸대응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
-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가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면, 애플, 구글 등의 외산 휴대전화 신고기능 미탑재 문제 등 해소 가능
  ※ GSMA의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경우 사실표준(de facto standard)화의 효과 발생

추진 일정

- 스팸정보 공유 : ’11.1월 ~
  ※ KISA-GSMA간 합의서 서명 및 교환, 시범서비스 참여 (’10.12일)
- GSMA 프로젝트 상용서비스 전환 : ’11년
4.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

SMART 스팸차단 및 대응 요령 홍보 강화

개 요
- 스팸방지를 위한 차단 및 신고 등 대응 요령을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

현황 및 문제점
- 정보보호 실태조사(‘09년, KISA)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스팸을 여러 정보화 역기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
  - 역기능 유형별로 심각성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점수화 했을 때, ‘스팸’이 3.54점으로 가장 높음
    ※ ① 스팸(3.54점), ② 개인정보 침해(3.48점), ③ 해킹/바이러스(3.40점) 등
- 반면, 상당수의 이용자들(약 24~30%)은 스팸방지를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스팸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용자들의 40%는 그 이유를 “조치방법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라고 응답

< 이용자의 스팸방지 조치 현황 >

<table>
<thead>
<tr>
<th>스팸방지 조치</th>
<th>이메일</th>
<th>휴대전화</th>
</tr>
</thead>
<tbody>
<tr>
<td>필터링 설정 등 기술적 차단</td>
<td>47.7%</td>
<td>45.2%</td>
</tr>
<tr>
<td>발송자에 수신 거부 의사 전달</td>
<td>36.7%</td>
<td>25.2%</td>
</tr>
<tr>
<td>관계기관에 신고</td>
<td>15.8%</td>
<td>14.4%</td>
</tr>
<tr>
<td>이메일주소 노출 최소화</td>
<td>9.1%</td>
<td>9.0%</td>
</tr>
<tr>
<td>이메일주소를 정기적으로 변경</td>
<td>3.0%</td>
<td>-</td>
</tr>
<tr>
<td>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td>
<td>23.7%</td>
<td>29.5%</td>
</tr>
</tbody>
</table>

< 자료 : 2009 정보보호 실태조사(KISA) >
□ 추진 방안

○ 이용자를 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발간

- 스팸 필터링 및 신고 요령,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 '스팸방지 SMART 5대 수칙'을 제정하여 반영
- 인터넷, 전화요금, SMS 요금 등과 같은 부가비용을 부과하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요령 안내

○ 청소년 대상 스팸방지 동영상 교육 자료 보급 확대

-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이를 막기 위한 예방 및 대응방법을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 형태로 소개
  ※ 포탈, 유관기관·사업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게시

○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스팸차단 부가서비스에 대한 안내 확대 및 가입절차 개선

- 이통사별로 상이한 부가서비스 명칭을 통일하고,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가입신청 단계를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 이용자 본인의 스팸관련 신고·상담 건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방법을 적극 안내·홍보함으로써 고충처리의 편의성 및 만족도 증진

  ※ 휴대전화 갭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spam.kisa.or.kr)에서 전화번호 입력,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처리결과 확인 가능

□ 추진 일정

○ '이용자를 위한 스팸방지 안내서' 발간 : '11.1월
○ 이통사 휴대전화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개선 : '11.2분기
○ 청소년 스팸방지 동영상 교육자료 보급 확대 : 상시
○ 스팸신고건 처리결과 확인방법 안내·홍보 강화 : 상시
V. 기대 효과

- ’09년도 종합대책 수립시 전망한 기대효과(’11년말까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30% 감소”)를 그대로 유지

- 종합대책 추진 이후 휴대전화 스팸은 5%, 이메일 스팸은 8% 가량 감소한 상태이며,

- ’09년도 및 ’11년도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경우, 당초 기대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1일 휴대전화 스팸수신량
  - 0.46통(’09.10월) → 0.31통(’11년말) ⇒ 0.15통 감소

▶ 1일 이메일 스팸수신량
  - 2.4통(’09.10월) → 1.6통(’11년말) ⇒ 0.8통 감소

※ 연간 스팸유통량 산출기준
  - 휴대전화 = 1인당 1일 수신량 × 이동통신 가입자 수(약 47,648천명) × 365일
  - 이메일 = 1인당 1일 수신량 × 인터넷 이용자 수(약 36,530천명) × 365일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세부 과제</th>
<th>발표</th>
<th>상태</th>
</tr>
</thead>
<tbody>
<tr>
<td>휴대전화</td>
<td>스팸커의 불법 휴대전화 개통 방지</td>
<td>휴대전화 개통 수 제한</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악성스팸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가입 제한</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명의대여 핸드폰 방지 민관 공동 홍보</td>
<td>’09년</td>
</tr>
<tr>
<td></td>
<td>사업자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스팸발송 역제</td>
<td>문자메시지 1일 발송한도 축소</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을 악용한 스팸발송 규제</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강화</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인터넷전화(070) 서비스를 악용한 스팸발송 제한</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가입자 본인확인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td>
<td>’09년</td>
</tr>
<tr>
<td></td>
<td>전송수신 단계의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스팸차단 효율성 제고</td>
<td>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확대</td>
<td>’11년</td>
</tr>
<tr>
<td></td>
<td></td>
<td>단말기 스팸차단 기능 개선</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제한 체계 구축</td>
<td>’11년</td>
</tr>
<tr>
<td></td>
<td>스팸 신고편의 증진 및 재송신 방지</td>
<td>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표준화</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광고 수신거부 서비스 제공</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스팸 전송자 규제 강화</td>
<td>’11년</td>
</tr>
<tr>
<td></td>
<td></td>
<td>스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td>
<td>’11년</td>
</tr>
<tr>
<td></td>
<td></td>
<td>불법 성인스팸(060 포함) 전송업체 제재 강화</td>
<td>’11년</td>
</tr>
<tr>
<td>이메일</td>
<td>스팸발송을 위한 이메일 인증 강화</td>
<td>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 전송 차단</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이메일 발신자 인증기술 도입 확산</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스팸차단기술 활성화</td>
<td>실시간 스팸 발신자 목록 보급 확대</td>
</tr>
<tr>
<td>신종 스팸 방지</td>
<td>인터넷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개발제공</td>
<td>’11년</td>
<td>신규</td>
</tr>
<tr>
<td>과태료 정수율 제고</td>
<td>스팸 과태료 체납자 관리 강화</td>
<td>’09년</td>
<td>계속</td>
</tr>
<tr>
<td></td>
<td></td>
<td>스팸규제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td>
<td>’09년</td>
</tr>
<tr>
<td></td>
<td></td>
<td>스팸 과태료 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td>
<td>’11년</td>
</tr>
<tr>
<td>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td>
<td>아태지역 실시간 스팸정보 공유체계 구축</td>
<td>’09년</td>
<td>계속</td>
</tr>
<tr>
<td></td>
<td></td>
<td>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유통량 분석공표</td>
<td>’11년</td>
</tr>
<tr>
<td></td>
<td></td>
<td>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td>
<td>’11년</td>
</tr>
<tr>
<td></td>
<td></td>
<td>휴대전화 스팸 글로벌 공동대응기반 마련</td>
<td>’11년</td>
</tr>
<tr>
<td>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td>
<td>SMART 스팸차단 및 대응 요령 홍보 강화</td>
<td>’11년</td>
<td>신규</td>
</tr>
<tr>
<td>구분</td>
<td>세부 추진과제</td>
<td>'11년</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1분기</td>
<td>2분기</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①</td>
<td>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강화</td>
<td></td>
<td></td>
</tr>
<tr>
<td>②</td>
<td>인터넷전화(070) 서비스를 이용한 스팸발송 제한</td>
<td></td>
<td></td>
</tr>
<tr>
<td>③</td>
<td>가입자 본인확인 준수 여부 관리 강화</td>
<td></td>
<td></td>
</tr>
<tr>
<td>④</td>
<td>이통사『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가입 확대</td>
<td></td>
<td></td>
</tr>
<tr>
<td>⑤</td>
<td>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 제한 체계 구축</td>
<td></td>
<td></td>
</tr>
<tr>
<td>⑥</td>
<td>스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td>
<td></td>
<td></td>
</tr>
<tr>
<td>⑦</td>
<td>불법 성인스팸(060 포함) 전송업체 제재 강화</td>
<td></td>
<td></td>
</tr>
<tr>
<td>⑧</td>
<td>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td>
<td></td>
<td></td>
</tr>
<tr>
<td>⑨</td>
<td>인터넷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개발·제공</td>
<td></td>
<td></td>
</tr>
<tr>
<td>⑩</td>
<td>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스팸유통량 분석·공표</td>
<td></td>
<td></td>
</tr>
<tr>
<td>⑪</td>
<td>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td>
<td></td>
<td></td>
</tr>
<tr>
<td>⑫</td>
<td>휴대전화 스팸 글로벌 공동대응기반 마련</td>
<td></td>
<td></td>
</tr>
<tr>
<td>⑬</td>
<td>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td>
<td></td>
<td></td>
</tr>
</tbody>
</table>

주요 사업목표 및 추진 일정

- 신중스팸 방지
-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 제고
< 붙임 3 >

이용자 스팸방지 SMART 5대 수칙

□ 휴대전화 스팸 방지수칙

①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② 단말기의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③ 불필요한 전화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④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⑤ 불법스팸은 휴대전화의 간편신고 기능 등을 이용하여 e콜센터 ☎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 이메일 스팸 방지수칙

① 이메일 서비스에서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스팸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②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전용 계정을 이용하기
③ 불필요한 광고메일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웹사이트, 게시판 등에 이메일주소를 남기지 않기
④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열어보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⑤ 불법스팸은 e콜센터☎118(spam.kisa.or.kr)로 신고하기
## 종합대책 추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table>
<thead>
<tr>
<th>영 역</th>
<th>세부 추진과제</th>
<th>정부</th>
<th>민간</th>
</tr>
</thead>
<tbody>
<tr>
<td>휴대전화 스팸 방지</td>
<td>①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스팸방지 자율규제 강화</td>
<td>-</td>
<td>-</td>
</tr>
<tr>
<td></td>
<td>② 인터넷전화(070) 서비스를 악용한 스팸발송 제한</td>
<td>-</td>
<td>-</td>
</tr>
<tr>
<td></td>
<td>③ 가입자 본인확인 준수여부 관리·감독 강화</td>
<td>-</td>
<td>-</td>
</tr>
<tr>
<td></td>
<td>④ 이통사「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가입 확대</td>
<td>10</td>
<td>20,000</td>
</tr>
<tr>
<td></td>
<td>⑤ 실시간 스팸차단 및 이용제한 체계 구축</td>
<td>230</td>
<td>500</td>
</tr>
<tr>
<td></td>
<td>⑥ 스팸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td>
<td>50</td>
<td></td>
</tr>
<tr>
<td></td>
<td>⑦ 불법 성인스팸(060 포함) 전송업체 제재 강화</td>
<td>30</td>
<td></td>
</tr>
<tr>
<td></td>
<td>⑧ 스팸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수사 강화</td>
<td>200</td>
<td></td>
</tr>
<tr>
<td>신종 스팸 방지</td>
<td>⑨ 인터넷 스팸 게시글 차단서비스 개발·제공</td>
<td>400</td>
<td></td>
</tr>
<tr>
<td>스팸대응 기반 고도화</td>
<td>⑩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스팸유통량 분석·공표</td>
<td>230</td>
<td></td>
</tr>
<tr>
<td></td>
<td>⑪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td>
<td>1,210</td>
<td></td>
</tr>
<tr>
<td></td>
<td>⑫ 휴대전화 스팸 글로벌 공동대응기반 마련</td>
<td>50</td>
<td></td>
</tr>
<tr>
<td>이용자 인식제고</td>
<td>⑬ SMART 스팸차단 및 대응 요령 홍보 강화</td>
<td>90</td>
<td></td>
</tr>
<tr>
<td>합 계</td>
<td></td>
<td>2,500</td>
<td>20,500</td>
</tr>
</tbody>
</table>